

광주 고교 무상급식 확대 '온도차'

광주지역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 부담을 놓고 교육청과 시청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 광주시의회는 11일 오전 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2018학년도 고교 무상급식 확대 여부를 논의했다.

전국 광역도시 중 최초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도입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으며 내년에는 최소한 1개 학년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고 3학년 무상급식에 필요

교육청 1개 학년 확대 예산 지원 요청

광주시청 예산 부담 크다며 난색 표명

한 예산은 314억9000만원이며 1개 학년을 추가할 경우 127억8700만원이 추가 소요된다.

올해 고 3학년 무상급식 비용 280여원을 전액 부담했던 광주시교육청은 내년에 자치단체가 식품비의 70%(광주시 61.6%·구청 8.4%)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치단체 지원 예산은 고 3학년의 경우 66억7700만원, 1개 학년을

추가하면 126억1600만원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고교 무상급식 확대나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지하철 제2호선 건설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아 무상급식까지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광주시가 주최한 시민 총회에서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 의

견이 제시돼 윤정현 광주시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가 이견을 보이자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이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 의장은 "학교급식 확대는 당연히 해야 할 과제로 재정상 여건으로 가부를 결정할 시간이 아니다"며 "내년에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확대하려면 광주시와 교육청이 공동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무상급식 실무진은 이 의장의 제안을 검토한 뒤 다음주에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조인호 기자

신안 해상서 짙은 안개로 레저보트 표류

한밤 중 짙은 안개로 방향을 잃고 표류하던 레저보트가 밤샘 수색에 나선 해경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1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9시59분께 신안군 비금도로 향하던 4.2급 레저보트 N호가 도착 예정시간보다 2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목포 북항의 한 조선소에서 수리를 마치고 오후 7시40분께 출항한 레저보트가 엔진고장이나 연료부족의 우려는 없다는 조선소 측의 진술을 토대로 예상항로에 대한 수색에 나섰다.

해경은 항로 인근 선박을 대상으로 수색협조 문자를 발송하고 경비정과 순찰정 등 5척과 마을어선 2척을 동원해 수색을 펼쳤다.

신장 황모(63)씨의 휴대전화는 배터리 부족으로 출항하기 전부터 꺼진 상태였으며, 평소 항로를 자주 왕래해 잘 알고 있다는 부인의 말에 따라 예상항로에 대한 야간수색을 이어갔다.

하지만 야간에다가 600m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로 수색은 어려움을 겪었다.

날이 밝으면서 수색에 속도를 내던 해경은 신고접수 8시간40여분 만인 이날 오전 6시47분께 신안군 암태면 후포도 서쪽 0.3km 해상에서 갓발 부이를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는 황씨를 발견하고 무사히 구조했다.

신장 황씨는 국지성 안개로 방향을 잃은데다가 항해장비 조작마저 미숙해 운항을 포기하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안=박영식 기자

서울 한 외고서 시험지 학원 유출의혹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지가 인근 학원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A외고는 전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가 B영어학원에 유출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며 해당 학원 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A외고는 한 학부모의 제보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해 학생과 교사 등을 조사했다.

이에 지난달 말 치른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에서 30개 문항 중 27개 문항이 B학원이 시험 직전 학생들에게 나눠준 시험 자료와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B학원 원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시험문제 유출 경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식당·편의점 침입 금품 훔친 노숙인 구속

부산 동부경찰서는 11일 식당·편의점 등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A(59)씨를 상습일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을 떠돌며 노숙생활 하던 A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9시 38분께 부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업주와 종업원 등이 순남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해 계산대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편의점에 침입해 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한 동선 추적으로 A씨를 검거했다.

여인숙 장기 투숙 60대 사망 보름 만에 발견

부산의 한 여인숙에서 장기 투숙 중이던 60대 여성이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됐다.

11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50분께 부산 남구의 한 여인숙에서 장기 투숙 중이던 A(63·여)씨가 자신의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다른 투숙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경찰에서 "사흘 전부터 A씨가 투숙 중인 방에서 썩은 냄새가 나 업주와 얘기해 방 문을 열어보니 A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초부터 이 여인숙에 홀로 투숙해 지내왔으며, 업주 등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8일 0시께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뉴스



가을로 물든 안동 하회마을 1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광주·전남 경찰 긴급체포 뒤 석방 10명 중 3명

인권침해 우려

광주와 전남지역 경찰의 불법 용의자 긴급체포 후 석방률이 10명 중 3명에 달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 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광주경찰은 174건을 긴급체포해 영장미발부 15건, 영장미신청 37건 등 석방률이 29.89%(52건)이다.

전남경찰은 같은기간 총 243건을 긴급체포해 영장미발부 30건, 미신청 55건 등 총 85건으로 34.98%의

석방률을 보였다.

석방률은 긴급체포 후 영장신청 없이 석방되거나 영장이 미발부된 집계이며 전국적으로는 10명 중 4.2명이다.

지방청별로는 울산청이 5.7명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청 5.3명, 충북청 5명, 서울청 4.6명, 제주청 4.5명, 대구청 4.4명, 인천청 4.3명, 경기북부청 4.3명 순이다.

긴급체포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48시간동안이나 피의자를 구금했다 하더라도 같은 수사기관인 검사의 승인 및 보고만으로 영장신청도 없이 석방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의 긴급체포 남용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13일 경찰개혁위원회가 긴급체포 개선방안을 권고한 것이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6년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던 것처럼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긴급체포의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만큼 긴급체포 개선권고사안을 철저히 이행해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경찰개혁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5·18특조위 헬기사격 피해 조사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추락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5·18특조위)는 11~13일 광주시를 방문해 헬기사격 피해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5·18특조위 조사팀은 광주에 머물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헬기사격을 목격한 제보자들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지난달 20일부터 헬기사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화와 우편으로 제보를 받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제보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헬기사격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의 신빙성 있는 증언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또 1980년 5월 18~27일까지 헬기사격으로 인한 총상환자의 환부나, 사망자의 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부를 토대로 총탄의 탄도, 각도, 방향 및 입·출사구의 크기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 의사회·전남대 병원·조선대 병원·기독교 병원·적십자병원·국군의무사령부 등 의료단체에 당시 진료 기록부 등 관련 자료와 해당기관에 근무했던 관련자들의 진술 등도 요청한 상태다.

특조위는 헬기사격 피해자와 목격자 증언, 의료단체가 제공한 자료, 광주시 5·18기록관에 수장된 실탄의 탄두들에 대한 전문가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정부 3.0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 IN
건강한 정보, 건강한 생활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검진종류	건강상태	효과
일반건강검진	발견 시	42%p 감소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발견 시	18%p 감소

※발견되는 질환이 완치되거나, 치료 시기에 따른 효과입니다.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